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윤원식 | 발행처: 대한민국의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27('23-5) | 2023. 5. 2.

민간군사회사(PMC)를 활용한 제대군인의 취업증진
박상중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한 향후 국가안보 전망과 전략
방호업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 향상이 절실하다!
이영석

민간군사회사(PMC)를 활용한 제대군인의 취업증진

박 상 중

(국방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들어가면서

국방문민화, 국방혁신 4.0, 인구절벽, 병력감축 등과 연계하여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제대군인의 안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미국, 영국 등 군사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제대군인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나, 선진국과 달리 관련법령의 부재와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못하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초개와 같이 헌신한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군인의 실질적인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튼튼한 사회적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간군사회사의 분석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군사업체(PMC)의 발전

민간군사회사(Private Military Company, PMC)는 군사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제대군인이 군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다. PMC 업체에서는 제대군인들에게 취업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PMC는 전쟁지역에서 군사작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군사작전 지원, 보안 서비스 제공, 운송, 군사훈련, 군사컨설팅, 자원 개발 및 인프라 보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회사나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PMC는 전투와 같은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 국제적인 분쟁 개입 등으로 인권 침해를 초래하여 국제적 규제와 정책,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PMC는 정부나 군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 군사훈련과 장비 구입, 군사적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PMC 업무는 고도의 군사적 임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때에 따라 임무 수행 도중에 사망할 위험성도 높아서 PMC 업계에 취업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MC 업계에서도 직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방탄조끼, 총기, 통신 장비 등을 제공한다.

국제사회의 PMC 운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블랙워터(Blackwater)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군사회사로 보안 서비스와 군사작전에 직접 개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이라크에서 미군과 함께 일하던 블랙워터 직원들이 시위대에게 사격을 가해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에이지스 디펜스 서비스(Aegis Defence Services)는 영국의 민간군사회사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군사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서비스와 군사작전 지원 등 대규모 보안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스타티스(Statis LLC)는 미국의 민간군사회사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분석과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지역에서의 정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PMC(Korea-PMC, 이후 K-PMC) 국내시장은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대부분 해외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라크에서 2010년 한국 대사관 경호, 민간인 보호, 대형 건설현장 및 기업 경비 등을 위해 PMC를 운용한 바 있으며,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K-PMC 업체들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현지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는 대회장 내외에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K-PMC는 국내에서 경찰 및 소방과 협업으로 경비 및 안전 활동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연계하여 다양한 보안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업체로는 Bullet-K, LS Mtron Security, 레드플래닛, KGS, KH PMC 등이 있다.

PMC 업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PMC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됐지만, 전투 임무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인권 침해 등 윤리적인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PMC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업무 범위와 활동을 위해 국제적인 합의와 규제를 통해 엄격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PMC 업계 자체적으로도 임무의 투명성 확보와 윤리 교육 등의 자구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PMC 업계의 성장과 제대군인들의 경험 활용

PMC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와 전투 환경 변화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정치적으로 선제적 자위권이 강조되어 군사력 사용의 기준이 불명확해지면서 군사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탈 냉전 이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민주주의 개념의 전파와 함께 국가 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전투 환경이 더욱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PMC는 군사 전문 민간 업체로서의 경험, 기술, 지식 등을 활용하여 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제고되었다. PMC는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일반적인 경호, 감시,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국가의 대외정책 변화와 전투 환경 변화, 국제사회의 PMC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PMC의 업무 범위가 군사적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군대 임무를 직접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인들을 대체하여 경비원이나 보안요원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 등 유럽과 중동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군대와 협력하여 직접적인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PMC 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국제적인 충돌과 테러 위협이 계속되면서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제대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PMC 업계는 제대군인들의 군사적 기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군사작전, 지휘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역할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PMC는 제대군인들에게 군사적 경험을 살려 다양한 직무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급여와 혜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제대군인들에게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취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K-PMC 취업을 통한 제대군인의 행복을 기대하며

제대군인들은 PMC 업계에서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취업할 기회가 열려있다. PMC 업체 또한 제대군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와 경쟁력 있는 취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대군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험을 고려하여 직무를 선택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재취업을 창출할 수 있다. PMC를 활용한 제대군인의 취업은 취업기회를 찾는 제대군인들에게 대안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PMC 업계에서도 전문역량을 갖춘 높은 수준의 인재를 모집할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PMC 업계는 전통적인 취업 분야와는 다른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대군인들은 PMC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합한 회사 선정,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이력서와 면접 준비 등 적절한 정보 수집과 준비를 통해 PMC 업계의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PMC 업무는 긴장된 상황에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강인한 신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제대군인 스스로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PMC 업계에서는 제대군인들에게 취업기회 제고를 위해 전문 지식, 무기 사용 및 훈련, 통신 기술, 위험 평가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자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교육 기관과 제휴를 맺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Blackwater, Aegis Defence Services, G4S 등의 해외 PMC 업체들은 제대군인들에게 업무 관련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인재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Blackwater의 경우, 제대군인 중에서 IT 보안 전문가, 통역사, 의료진 등의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PMC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5일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G4S는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PMC 환경은 방위사업법과 국방개혁법이 PMC 활동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나 관련법령 등 제대로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K-PMC의 무기 사용을 위해서는 국정원과 경찰성의 승인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까지 K-PMC 업체의 국방물류, VIP 경호, 보안 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업 획득 경쟁력은 대규모 일반기업의 가격경쟁 등에서 떨어져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K-PMC 시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제대군인들은 국내외 PMC 업체에서의 취업기회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한 향후 국가안보 전망과 전략

방 호 엽

(중국 산둥대 아태연구소 외래교수)

I 2022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

1. 북한, 핵미사일 능력 강화

북한은 이제 노골적으로 전술·전략 탄도탄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이를 도발 상황으로 정치적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1년 4월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 연구소는 2020년까지 북한은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며,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핵 운반수단에 필요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해 이미 2017년에 화성-12/14/15형 미사일 시험을 통해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였고 2023년 4월에 고체연료인 화성-18형 발사를 통해 핵 강국 이미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에 또 다른 핵 투발 수단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1월 14일 제8차 당대회의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북극성-5사’ 신형 SLBM을 공개하였고, 이후 10월 19일에는 2,000톤급(고래급) 잠수함에서 SLBM 시험발사를 하였다. 그리고 2022년 10월 노동당 창당 77주년에서 내륙 저수지의 수중 바지선을 이용하여 ‘콜드론치’ 방식으로 SLBM을 쏘며 핵무기의 선제 사용 능력을 강조하였다.

2. 북한, 핵미사일 완성과 법적노력 강화

북한은 2022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제정, 핵과 관련한 새로운 법적 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강대강·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23년 신년사 성격을 가진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자신들의 핵 공격에 대한 법적인 밑받침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맞게 국권과 국익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23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전술핵무기와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해 핵 선제공격 능력과 핵 보복 타격 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것은 UN 안보리의 대응력 약화 속에 핵미사일 위협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II 한국군의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의 역할

1.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2023년 3월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전후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잇달아 모의 핵탄두 폭파 실험을 벌였다. 핵탄두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중 핵탄두 폭파 시험을 했으며,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 무인잠수정을 물속에서 폭발시켜 쓰나미를 유발해 우리 해군 기지나 미 항모 전단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시험도 사흘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사실상 실전 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에 와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전략적 중심부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스텔스기와 핵심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의 도입과 배치를 발전시켜 대북 억제력을 높이며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한미동맹의 역할

2022년에는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하고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확장 억제수단 운용 연습(TTX: Table Top Exercise)을 하였다. 여기에 한국 해군은 신형 이지스함,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4,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여 전략적 억제 능력을 보강하며 나아가 경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무력 강화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2년 8월에 한·미 연합훈련을 약 4년 8개월 만에 시뮬레이션 방식이 아닌 실제 병력 기동훈련으로 발전시켰으며, 9월에는 5년 만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합동참모본부 주관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 훈련에 미군이 참여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는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안보 동맹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III 향후 국가안보 전망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

2023년은 북한이 전술 및 전략 핵미사일의 완성을 통해 또 다른 도발의 수단을 강구하며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핵 무력화 상태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 행보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느 해보다 유동성이 큰 2023년의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확고한 국방 태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북한이 고도화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 투발 능력은 한국의 실존과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2022년부터 북한은 신형 타격 수단과 전술핵무기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것은 한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공격 무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노력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전방 위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이 전고할수록 한국이 기대하는 외교력과 협상력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연합 위기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북한은 유동적인 정세변화의 틈새를 이용하여 핵 무력 능력의 고도화를 꾀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분열의 틈을 만들 고도의 계산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대내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당한 구실을 붙여 군사 도발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이 개연성을 높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공고한 연합 억제 태세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정세 오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북 심리작전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공세적 대남정책에 더해서 최근 더욱 심화되는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각종 긴장 조성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8년 남북이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북한의 성실한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체제 유지에 가장 민감한 대북 방송 및 전단 작전을 개시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 무력화 정책의 전략적 태도를 보면 체제 유지와 연결되어있는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정책은 비핵화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필요한 공작 활동을 통해 북한 지휘부를 갈등 속에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하는 층을 확보하는 노력을 은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2023년 북한 핵 정책의 변동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김정은이 자신들의 고위층에 대한 감시 상태를 무력화시키는 대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래서 내부 붕괴에 필요한 동조 세력을 만들 수 있는 비밀공작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 향상이 절실하다!

이 영 석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최근 초급간부의 지원율 저조와 함께 전역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최근의 軍 환경은 많이 변하고 있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은 軍 간부에 비해 획기적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간부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근무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 성향과 자기주장이 강한 MZ 세대 병사를 관리하는 데 많은 고충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취업과 주택 문제 등의 제한으로 軍 간부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본다. 이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저조한 초급간부의 지원율 저조와 전역 증가 현상에 대해 살펴본 후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초급간부의 지원율 저하

초급간부에 대한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원율 감소는 상상을 초월한다. ROTC 지원율은 28%, 학사장교는 35% 감소했다. 올해 육군3사관학교는 550명 입학 정원에 106명 미달한 444명이 입교했고, 대학을 졸업 뒤에 장교로 임관하는 전국의 8개 협약대학의 군사학과 지원율 또한 정원 320명 대비 147명이 입학함으로써 46% 수준에 불과하다. 부사관 지원율 또한 26%나 감소하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군의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상 의대생은 6년 과정의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또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다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를 지원하여 38개월 정도 군복무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추세는 병사로 입대하여 18개월을 복무하려고 한다. 이는 가장 짧은 기간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의 주요 이유는 첫째, 현저하게 짧아진 병사들의 군대 복무 기간이다. 둘째, 초급간부와 병사와의 월급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셋째,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와 이에 따른 책임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간부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초급간부들의 전역을 증가

이처럼 초급간부의 지원을 감소뿐만 아니라 초급간부의 전역 증가 현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단기 복무 장교를 제외한 장기 복무를 택했던 장교의 전역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2022년 전역을 신청한 5년차 장교는 184명으로, 2019년 이래 가장 많으며, 이 중 올해 전역이 확정된 인원은 164명이다. 육군은 2021년 58명이던 5년차 전역 신청자가 올해 147명으로,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자퇴 인원의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자퇴 인원은 63명으로 2018년 9명에 비해 7배가 증가했다. 이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는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인가? 첫째, 열악한 주거 시설이다. 수십 년 된 숙소에 곰팡이가 문제 되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대부분 혼자 방을 쓰던 초급 간부들이 두 명이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둘째, MZ 세대 병사 관리가 어렵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 부모님까지도 민원성 등의 통화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셋째, 계급 정년에 따른 전역이다. 다른 공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는 점이다. 넷째, 전역 후 취업이나 주거에 대한 문제이다. 주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초급 간부들의 전역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중에서 전역 후의 취업과 주택 등의 복지 문제도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 향상, 무엇이 우선인가?

제대군인의 복지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지원율과 전역자 증가 현상부터 살펴보았다. 훌륭한 초급간부 확보는 제대군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가 완벽하면 군 간부가 되고자 하는 인원의 증가는 당연하다고 본다.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이들에 대한 복지는 다양하다. 그러나 필자는 제대군인에 가장 필요한 복지로 세 가지로 한정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에 대한 보장이다. 이는 국방부를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5~2019년의 5년간 전역자 36,404명 중 취업자 비율은 57.5%에 불과하였다. 연차별로 전역 1년차는 43.6%, 2년차는 56.5%, 3년차는 60.4% 등 이다. 이는 지속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해 취직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대군인 중 여성 취업률은 42.7%로 남성의 58.2%보다 낮았으며, 34세 이하는 51.6%이다. 특히 34세 이하가 90.2%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10년 미만 중기 복무자로 연금 혜택이 없기에 대부분은 제대 후 한동안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취업이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본다.

둘째, 주택 문제이다. 2022년 우리나라 주택 보유자는 국민 평균 60%이고 공무원 은 64.1%인데 비해 직업군인은 33.4%에 불과하다. 직업군인 대부분이 軍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택이 없는 사람은 전역과 동시에 난관에 처하게 된다. 특히 중기 복무자는 취업과 함께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복무자에 적합한 국민임대주택이나 아파트 분양 등을 우선 공급하고 또한 소요되는 자금을 대해서는 저리 또는 무이자 융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제대군인 자녀를 위한 복지 확대이다.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현재 시행 중인 군 자녀 특례 입학의 정원 확대(특히 명문대) 및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제대군인을 위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시행된다면 유능한 인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군 간부로 지원할 것이고 이는 안보태세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